

14.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행정국장)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9월 20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오상)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여 물품 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관리전환”을 “소관전환”

으로 “검사원”을 “검사공무원”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소모품 기준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춰 “1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함.

- 또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물품 보관자의 변상책임 조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조치함에 따라 삭제하고,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이 개정조례안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사용 용어, 물품 분실·훼손 시 조치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11조의2에서는 시장은 법 제92조⁵⁾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동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기존에도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기 실시 중인 조치로 관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 ▶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에 관한 내용을 보다 읽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소요조회 생략 대상에 시행령 제77조제1호6)를 추가하고 소요조회 대상기관 중 누락된 일부 행정기관 등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

구 분	기 준	개 정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 1천만원 이상 물품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구·군, 정부 각 부처, <u>서울특별시</u> ·광역시·도	----- <u>합의제</u> <u>행정기관(추가)</u> ----- ----- <u>특별시</u> -----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물품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구·군	----- <u>합의제</u> <u>행정기관(추가)</u> -----

- ▶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법 제60조제2항7)에 따라 물품의 분실·훼손 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에 대한 내용인 현행 조례 제23조8)는 삭제하였음.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8)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 ▶ 그 밖에 안 제1조 ~ 안 제11조, 안 제13조 ~ 안 제29조, 안 제31조 ~ 안 제34조, 안 별표 2에서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수정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올바른 행정 용어를 사용하는 등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및 체계 전반을 정비하였음.
- ▶ 마지막으로 안 별표 1에서는 안 제5조9)와 관련한 물품의 품종·상태에 따른 구분 기준을 정비하면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소모품 대상으로 취득 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을 추가하는 등 효과적인 물품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였음.

※ 안 별표 1 소모품 대상 기준 개정 내용

(현 행)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개 정)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예: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예: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9)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에 따른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 이 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 법령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 적합성 및 조례 활용성 강화의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 ▶ 다만,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반해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소모품 기준이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물품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음.	○ 기존 기준이 30년 가까이 된 규정이기도 하고 언급한대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준을 현행화한 것임.
○ 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네, 알겠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